

Ⅲ.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

1 대·내외 경제전망

□ (세계경제)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 둔화 예상

- OECD와 세계은행(WB)은 '22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3.0%, 2.9%로 기존 전망 대비 $\Delta 1.5\%p$, $\Delta 1.2\%p$ 하향 조정(OECD·WB, '22.6.8.)
-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,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교역 위축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물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(OECD, '22.6.8.)
- ※ OECD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(%) : ('19) 2.0 ('20) 1.3 ('21) 3.7 ('22) 8.8 ('23) 6.1

□ (국내경제)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, 대외여건 악화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률 둔화 예상

- 국내경제는 ('22년) 2.7%, ('23년) 2.4% 성장할 것으로 전망,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$\Delta 0.3\%p$, $\Delta 0.1\%p$ 하향 조정*(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, '22.5.26.)
- ※ '22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(%) : (IMF('22.4.)) 2.5, (OECD('22.6.)) 2.7, (한은('22.5.)) 2.7
- * 최근 경제동향 보고에서는 금년 경제성장률이 2.7%보다도 하회할 것으로 예상(한은, 7.13.)
- 민간 소비는 거리두기 해제, 소득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 예상
- 다만, 주요국 성장세 약화 등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,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투자 회복세도 완만할 전망
- 특히, 물가 상승 압력 확대로 '22년 소비자물가는 4.5% 상승 전망

< 한국경제 주요 지표 전망(% , 5.26. 기준) >

	'21년	'22년	'23년
경제성장률	4.0	2.7	2.4
민간소비	3.6	3.7	2.7
설비투자	8.3	$\Delta 1.5$	2.1
소비자물가	2.5	4.5	2.9

□ 재정운용 방향

① 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지방재정 운용

- (효율적 예산편성) 지역 경제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연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되, 전략적 지출 재구조화 추진
- (신속집행) 사업추진 일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, 관행적 예산 이월 방지 및 불용액 축소 등 전략적 재정집행 추진

② 복지 분야 지출구조 개선 및 자체사업 효율화

- (재정부담 구조 합리화) 사업특성 및 수혜대상,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국가-지방 재정부담 구조 합리화
- (자체사업 정비) 기존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저성과 사업 및 유사·중복사업 정비 등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대비

③ 지방재정의 자율성·책임성 제고

- (자율성 강화) 지방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정책을 실현하는 자치분권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, 지자체 재정운용의 유연성 확대 지속 추진
- (책임성 확보)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투명성·책임성 강화 병행

④ 고용·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견인

- (지역산업 혁신) 미래 경제구조 전환에 대비하여 디지털·녹색산업 등 향후 지역 유망 산업 발굴·투자 확대로 경쟁력 확보
- (일자리 창출 지원)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여 전직·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훈련 및 정책적 지원을 실시
- (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)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의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모델 발굴

① 우리경제의 확고한 반등과 도약을 뒷받침

- (소비·관광) 방한·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거점도시,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고,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맞게 문화산업 집중 육성
- (수출·투자) 수출 품목·국가 다각화, 비대면수출, 통상분쟁 지원 등으로 무역 리스크에 대응하고, 첨단기술 보유 유턴·외투기업 유치
- (中企·벤처) 중소기업의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, 혁신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금융·R&D 등 지원 강화
- (균형발전) 광역메가시티와 강소도시를 연계 육성하고, 인구감소·낙후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등 지역특화 지원 강화
- (주력산업·공급망) 산단 스마트化 및 인력양성 등을 통한 자동차·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가핵심자원의 선제적 비축

②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

- (고용창출)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,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노동전환 지원
- (사회안전망) 임신·출산·육아 전주기에 이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, 취약계층 대상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향상
- (생활안정) 식료품, 에너지 비용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, 양질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거부담 완화
- (소상공인) 위기 사업체 대상 채무관리·경영개선, 폐업 및 재창업지원 등 패키지 신설로 소상공인 회복 및 Re-START 지원
- (취약계층) 자산형성·주거·일자리 등 청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, 농어민·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

③ 디지털·저탄소 등 경제·사회구조 대전환을 위한 미래투자 확대

- (디지털) 메타버스·블록체인, AI·데이터 등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, '디지털 정부' 구현을 뒷받침
- (저탄소) 산업·에너지·수송 등 부문별 저탄소화 및 석탄발전 등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, 탄소중립 국민실천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
- (신기술) 기술패권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해 양자·우주 등 10대 국가 전략 기술* 및 저탄소·환경개선 관련 기술산업 생태계 고도화 지원
 - * 10대 국가전략기술 : 인공지능, 양자, 우주·항공, 첨단로봇·제조, 이차전지, 반도체·디스플레이, 첨단바이오, 5G·6G, 수소, 사이버보안
- (인재양성) 디지털·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·신기술 교육·훈련을 확대하고,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과 질 좋은 평생교육의 허브화를 위한 고등·평생교육 투자 확대
- (인구구조) 초저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 등 축소사회 적응, 고령사회 서비스 발굴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

④ 국민안전 보호와 글로벌 경제안보 역량 강화

- (안전) 산업재해, 자연재해 등에 대한 선제적·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,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구제 등 범질서 확립
- (보건) 국민의 건강·생명권 보장 및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공공·지방 필수의료 인력·장비·시설 등 적극 확충
- (생활) 新유형 처리시설 확충 등 폐기물 처리 고도화,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및 깨끗한 물 등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
- (국방·보훈) 핵·WMD 대응 핵심전력 증강, 미래戰대비 R&D 및 장병 사기 진작 등에 집중 투자하고, 국가 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
- (경제안보) CPTPP*, IPEF** 등 新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하고, 개도국 지원을 위한 전략적 ODA 등 경제협력 강화

* 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 ** 인도-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

① 전략적 지출조정 등을 통한 전면적 재정지출 재구조화

- (전략적 지출조정) 경제·사회 여건 및 사업수요 변화를 반영하여, 분야·부처 내 투자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투자여력을 확보
- (한시지출 정상화)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각종 한시·일몰 지원 소요 등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축소
- (의무지출) 법령개정 및 재정제도 개선 등을 통한 경직적 재원배분구조 개편으로 재정운용의 탄력성 제고
- (정책금융) 직접 용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, 지출 규모는 절감하되 수혜 규모는 유지·확대
- (사업구조 개선) 사전예방 중심으로 재난지원 편성방식을 개선하고, 중앙·지방 및 정부·민간 간 역할·재원 분담체계 재정립

② 집행실적·성과평가 등을 고려, 재량지출 10% 절감

- (집행부진) 연례적 이월·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수준을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사업구조 개편 등으로 집행개선
- (연례적 이전용) 관행적·반복적 이전용 재원 사업은 이전용 규모 등을 감안한 실소요 수준으로 선제적 감축
- (공공부문 솔선수범)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를 절감*하고, 정부 위원회 중 한시·일몰조직은 원칙적으로 종료
- (보조·출연·출자) 보조사업의 보조율 체계를 원점 재검토하고, 관행적 출연·출자 사업의 존속 여부 및 적정소요를 집중 점검
- (외부지적 반영) 재정사업 자율평가,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각종 재정사업평가 결과 성과미흡 사업 구조조정(예: △10% 조정)

3 신규재원 발굴 및 재정준칙 등 재정관리 강화

- (정부재원의 효율적 활용) 유사기금 통폐합으로 회계·기금간 칸막이를 해소하고, 특별회계·기금의 여유재원 최대한 활용
- (국유재산) 민간의 자본·창의를 활용한 민간참여개발을 활성화하고 공공청사(국가)+생활SOC(지자체) 등 복합개발모델 적극 발굴
- (민간투자) 민투사업 지원대상 확대, 사업방식 다각화(수익형-임대형 혼합), 부대사업 허용 등을 통해 민자사업 전환 활성화
- (성과환류) 핵심사업평가, 일자리사업 평가 등을 통해 재정사업의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고,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
- (사회보험)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중장기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,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·추진
- (재정준칙) 재정준칙의 원활한 도입·적용을 위해 '23년 예산안은 준칙 도입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편성

4 정책협의를·현장소통 강화 등으로 열린 재정 구현

- (정책협의) 자원배분의 효과성·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·부처 등 주요 재정정책 파트너와의 협의채널 신설·내실화
- (현장소통) 예산 편성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수요자·전문가 등과의 소통 강화
- (정보공개)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 편성·집행 현황, 부처별 사업 정보 등을 열린재정·디브레인 등에 통합 공개
- (소통 플랫폼) 참여예산, 설문조사 등 기존 참여 방식에 더해 메타버스, 온라인 청원 게시판 등 접근성이 높고 스마트한 플랫폼을 추가

세입 여건

-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경제 전반의 개선을 기대하였으나, 물가 상승세 확대,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 불확실성 증대
 - (지방세) 부동산 가격상승 둔화, 부동산 거래 위축,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지방세 지속적 성장 불투명
 - (세외수입)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감소되었던 사용료, 수수료 등 세입 정상화 및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
 - (외부재원) 지방 분권에 따라 지방소비세·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 증가가 예상되나 실물경기 둔화, 물가상승세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 상존

세출 여건

- 지역경제 회복, 약자와의 동행 등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
 - 골목상권,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 발굴·추진
 - 저소득층, 신체적·사회적·문화적 소외계층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추진
 -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·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
 - 저출산·고령화, 1인 가구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 전망